



제29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별내면 배드민턴장 조성】**

검 토 보 고 서

2023. 7. 14.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서 용 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 제안연월일 : 2023. 7. 5.
-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2. 제안이유

-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예산을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 |
|---------------------------|-------|
| ·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 자치행정과 |
| · 별내면 배드민턴장 조성----- | 체 육 과 |

3. 검토의견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의 건>

- 본 안건은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별내 택지 중 LH 소유의 유희부지 약3,200㎡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소요예산은 86억원 가량으로 산출 근거는 국토부 훈령인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약체결 추정일인 2023. 10. 1. 까지의 민법상 이자를 추산한 결과로서 계약체결 시점 지연에 따라 증가될 수 있음.
- 검토 결과, 공영차고지로 사용되던 유희부지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확대 이전과 그 밖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매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주변 여건상 향후 예상되는 주차 문제와 건축비를 감안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⑧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택지중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택지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자계산

- 준공일 : 2014. 3. 31.

- 기산일 : 2016. 4. 1.

2

- 계약추정일 : 2023. 10. 1.

- 기산일로부터 계약추정일까지의 일수 : 2,740일

- 이자율 : 5%

- [조성원가 6,298,278,386원 x 5% x 2,740] ÷ 365 = 2,364,011,339원

<별내면 배드민턴장 조성 건>

- 기존 청학리 소재 43번국도 교량 하부의 배드민턴장이 철거될 상황에 있어 배드민턴장을 대체 조성하는 사항으로 별내면 광전리 123-6번지 별내면사무소 뒤편 사유지에 지상 1층, 건축면적 600㎡의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임.
- 해당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건축비 및 부대비용으로 19억 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임

-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현장 방문시 제기되었던 향후 여건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경기장 면수 증가 등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4.20]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⑦ 생략